

## 북핵 문제와 러시아의 대응

신 범 식 (인천대 정외과)

### 요약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상실한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회복과 극동 및 시베리아의 아태지역 경제로의 편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북핵 및 한반도 문제에서 당사국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정직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러시아가 발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적극적인 활동을 펴왔다. 그 결과 최근 BDA 자금중계와 대북 경협을 활성화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평판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고양해 나가고 있다. 2.13 합의 이후 논의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시나리오는 크게 부분적 성공, 완전한 성공 그리고 실패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부분적 성공의 시나리오와 관련해서 러시아는 BDA문제해결과 같은 역할을 바탕으로 초기 이행조치의 실행 및 검증과정에서 나타나는 이견들을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이러한 초기 이행 조치를 불가역적인 프로세스로 정착시키기 위한 동북아 평화 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러시아의 노력은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구축을 통한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기초를 마련하는 동인으로 작용하여 완전성공의 시나리오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초기조치 및 불능화조치가 진행되는 가운데 생겨난 이견이 6자 회담을 마비시켜 2.13 합의의 실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러시아는 새로운 대화의 장을 마련하거나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북한문제로서가 아니라 지역적 안보 문제로서 북핵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핵 위기로 인해 지연되는 러시아의 동북아에서의 이익의 손실을 보면서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 I. 서론

러시아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핵확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입장과 러시아의 동북아정책이 가진 기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

세계적 차원에서 러시아의 핵비확산 정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러시아의 미국과의 관계이다. 탈냉전기 미-러의 협력은 세계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체제의 기본적인 축으로 작용하여 왔다.<sup>1)</sup> 하지만 새로운 미국주도의 질서는 새로운 위협의 출현을 낳았고, 이 모든 위협에 대응할 새로운 비확산 체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sup>2)</sup> 새로운 힘의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 러시아는 편승과 견제라는 이중적 입장을 보이며, 이는 다시 러시아로 하여금 힘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다자주의적 해결방식을 선호하게 만든다. 이러한 러시아

1) Christopher D. Jones, "The Axis of Non-proliferation," *Problems of Post-Communism* Vol. 53, No. 2, (March 2006), pp.3-16.

2) 예를 들어 다음을 참조, George Perkovich et als., *Universal Compliance: A Strategy for Nuclear Security*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04).

의 입장은 수직적 및 수평적 핵확산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미국과 러시아의 접근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러시아의 북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러시아의 국익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러시아의 기본적 입장은 무엇인가? “지정학적 수압”(hydraulic pressure of geopolitics)으로 불리는 잠재적 안보위협은 도리어 동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sup>3)</sup> 이 지역은 가장 심각한 군사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한반도에 대해서 러시아는 다음과 같은 이해를 지닌다.<sup>4)</sup> 푸틴 대통령은 2000년 6월 발표된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개념’에서 한반도정책 방향을 “(러시아의 외교적) 노력은 한반도문제 해결에서 러시아의 동등한 참여 보장과 남북한 모두와의 등거리관계(balanced relations)를 유지하는데 집중할 것이다.”<sup>5)</sup>라고 제시하였다. 이 남북 등거리정책을 통해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적 안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러시아 극동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개발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sup>6)</sup> 따라서 안보 차원의 한반도정책 목표는 남·북한 간 또는 제3자의 개입에 의한 무력충돌 예방과 과도한 군사력 집중 억제로 요약된다. 여기서 전자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불안정이 초래하는 안보비용을 제거하기 위함이고, 후자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동북아 군비경쟁의 도미노

3) 박진영, “부시 행정부의 동아시아정책,” 『국가전략』 7권 4호 (2001).

4) 홍완석, “북핵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역할,” 『한국과 국제정치』 19권 2호 (2003).

5)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Вестник, No.8 (август 2000).

6) Vladimir Tkachenko, “North-South Summit and Russia-North Korea Relations,” *KIEP World Economy* Vol. 3, No. 7. (2000).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푸틴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남북문제의 중재자로서, 나아가 가능하다면 동북아 세력균형의 조정자로서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상을 강화하여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정치적 이익을 추구한다.<sup>7)</sup> 그리고 러시아는 한반도 접근을 통한 철도연결, 물류체계구축, 에너지개발 및 남북러 3각협력 등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sup>8)</sup> 러-북관계 정상화가 제공한 푸틴의 신 등거리 노선이 한반도에서 어느 정도 위축된 러시아의 지정학적 운신의 폭을 확대시켜준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한반도 및 동북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북한은 러시아의 중요한 지정학적 지렛대다. 러시아의 국가적 과제인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에너지자원 개발, TKR-TSR 연결사업, 미국이 독식하고 있는 한국무기시장 진출, 러시아의 세계 정치경제기구 가입,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중요한 안보이익(한반도 6자 회담과 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 창설 등) 확보 등을 위해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북아에서 북한의 핵 시위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고조는 러시아에게 중요한 위협이 된다.<sup>9)</sup>

따라서 러시아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의 이해 당사자로서 북핵위기

7) Бом-Сик Син,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в отнош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о время 2-ого президентского правления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и её значение дл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Korean Journal of Slavic Studies* Vol. 19, No.2 (2004), pp. 675-710.

8) Г.Д Толорая, "Россия -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осле саммита в Сеуле,"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No. 2 (2001), pp. 14-19.

9) 신범식, "6자회담과 러시아의 역할," 한국북방학회, 서울평화통일포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개국의 입장과 전망】(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05년 4월 13일) 발표문.

의 해결과정에 절대적인 참여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둘째,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사태는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고, 주변국의 군비경쟁 및 일본의 재무장화를 촉진시킴으로써 러시아의 극동에 안보적 위협으로 인식되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sup>10)</sup> 셋째, 한반도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적극적인 지지의 표명이다. 한반도에서의 갈등과 분쟁의 발발은 러시아의 안보에 대한 위협일 뿐더러 러시아가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극동 및 시베리아의 개발을 통한 유라시아국가로서 러시아의 번영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따라서 이러한 러시아의 국가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북핵위기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안정 및 평화 정착은 남북한과 공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들 국가들이 극동 및 시베리아의 발전과 이 지역 경제협력체의 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러시아는 동아시아 및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영향력 있는 역내국가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갈등은 러시아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sup>11)</sup>는 로슈코프(Alexander Loshukov) 외무차관의 말처럼, 북핵위기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은 러시아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러시아는 민주주의의 착근, 시장경제 성장, 정치사회적 안정 등

10) 동북아 국가들의 핵무장 상황과 개발 능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Алексей Арбатов, Василий Михеев (ред) *Ядерно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Москва:Московский Центр Карнеги, 2005).

11) *ИТАР-ТАСС* (January 19, 2003).

내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경선에서의 안정적인 안보환경 조성을 대외정책의 핵심주제로 삼아왔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불안이 초래하는 안보비용을 제거하고, 또 옐친 시대 한반도 4자 회담에서 소외됨으로써 겪어야만 했던 손상된 대국적 자존심을 회복하며, 미국의 패권적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는 과거처럼 북핵 문제에 더 이상 소극적 방관자로 남을 수는 없다.<sup>12)</sup> 따라서 미국의 대북 선제 군사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는 “제 2 영변 위기”가 고조되자 러시아는 동북아 4강 가운데 가장 먼저 적극적 중재자임을 자처하고 나서게 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러시아의 국가이익의 견지에서 표출되는 러시아의 북핵위기에 대한 대응을 고찰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북핵위기 해결에 관한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러시아의 대응을 전망해 보도록 할 것이다.

## II. 북핵위기 해결에 대한 러시아의 기본 입장

### 1. 6자회담과 러시아의 역할

2차 북핵위기가 발발하면서 보여준 러시아의 대응은 새로운 힘의 동학을 형성해 가고 있는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핵 비확산 정책의 목표는 일의적으로 규정되기 어려웠다. 이 지역에서 불안정한 위상을 가지고

12) A. B. Воронцов, “Война компромиссов,” (2003), in <http://north-korea.narod.ru/vorontsov.htm>

있는 러시아로서는 한반도 핵문제를 자신의 당사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게 만들었다. 특히, 러시아는 아시아 지역의 일원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목표의 달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극동 및 시베리아의 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에너지 및 운송 분야의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핵 외적인 요인이 러시아의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접근에 커다란 영향을 주며, 이는 러시아의 대동북아 전략이 군사·안보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의 복합적 고려 속에서 추진됨으로써, 핵문제와 비핵문제가 혼합(nexus)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은 제2차 북핵위기의 발발을 통하여 딜레마에 봉착하게 만들었다.<sup>13)</sup> 우선, 러시아는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 무기 확산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원칙에 있어서는 미국과 목표를 공유하지만, 북한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 한반도영향력 상실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이러한 미국에 대하여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협조하지만 미국의 일방적인 몰아붙이기에는 반대한다. 또한, 6자회담의 지루한 공방이 대북압박용 명분축적을 노리는 미국에게나 시간벌기를 통한 핵무기 소유가능성의 제고를 노렸던 북한에게나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가운데 러시아가 의도하는 평화적 해결과 비핵화라는 목표를 모두 놓칠 수도 있는 딜레마에 러시아가 빠지게 만들었다. 이에 러시아는 중국 및 한국과 함께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어떻게든 절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러시아는 북한에 우려할

---

13) Yong-Chool Ha and Beom-Shik Shin, *Russian Nonproliferation Policy and Korean Peninsular* (Strategic Studies Institute at U.S. Army War College, Monograph, January 25, 2007).

만한 수준의 핵무기가 아직도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북한의 입장에 소극적 지지를 보냄으로써 러시아의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회복을 노리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은 적어도 지나간 네 차례의 6자회담에서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14)</sup> 우선, 2000년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급속한 관계 발전이 6자회담의 성립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은 온당한 평가이다. 그렇지만 6자회담의 개최는 북러관계 개선과 그에 따른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이 증가된 직접적 결과이기 보다는 도리어 러시아의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그에 대한 평가로부터 기인하였다는 이해가 더 타당해 보인다. 둘째, 러시아의 “사심없는 브로커”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러시아는 북한의 입장을 다각적으로 주변국들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키고 자국이 구상하는 ‘일괄 타결’의 제안이 북핵위기의 포괄적, 단계적 및 병행적 해결이라는 원칙 속에서 적극적 중재역할을 수행하였다. 셋째, 러시아는 2차 북핵위기의 전개 및 그 해결의 모색과정에서 위기의 가속화 내지는 급속한 긴장의 고도화를 방지함으로써 북·미대결의 위기적 국면을 모면케 하였다. 넷째, 러시아가 동북아 안보문제의 해결방식으로 꾸준히 주장하여 온 다자적 협의체의 시도로서 6자회담의 진행에서 관련국들의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6자회담은 ‘다자적’ 협의체의 실험으로서 지니는 의의가 크며,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을 관련국들에게 반복적으로 밝힘으로서 미국과 중국, 남한과 북한 사이의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다자주

---

14) *Ibid.*



의적 동북아 안보체제의 창설과 관련된 러시아의 입장은 4차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을 통하여 동북아 관련국들의 공동의 관심으로 구체화되었다.

## 2. 9.19 공동성명—10.9 핵실험—2.13 합의 그리고 러시아

부시1기 행정부는 리비아식의 모델에 따라 PSI구상을 축으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한 제재를 추진하기 위해 “5 against 1”의 구도를 형성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강경노선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 또한 김대중 정부 이래로 추진하여 온 대북한 포용정책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미국의 “5 against 1”의 구도에 의한 대북 압박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제네바 핵합의에 대한 위반을 테러리즘의 확산과 연관시켜 지구적 의미의 핵문제 제로 취급하려 했지만, 중국은 북한 안보상 위협 인식을 거들며 이 문제가 미국 측에도 일단의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이 문제를 동북아의 안보체제 문제로 확대하여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양측 사이에서 러시아는 한국과 함께 두 입장이 조화될 수 있는 중재적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이로써 6자회담 참가국들 사이에 나타난 북핵위기의 해법을 둘러싼 입장은 “2(중국, 북한):2(한국, 러시아):2(미국, 일본)”의 형국으로 전환되어 갔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제2기 부시 행정부의 출범 초기에도 “폭정의 종식”을 향한 대북 강경입장에 한계를 드리웠고, 대북 유화책의 단초가 나타나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게 되었다. 특히 4차 회담에서 9.19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에 대한 미국의 반대

가 “말 대 말(word for word)” 합의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이 되었을 때에 러시아가 중국 및 북한의 입장에 가세하여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고, 한국 정부도 이러한 타협을 지지하면서 중국 및 러시아와 함께 미국을 설득함으로써 참가국들이 모두 동의하는 북핵문제 해결의 기본적 원칙과 목표로서 9.19 공동성명이 도출되었다.<sup>15)</sup>

하지만, 9.19 공동성명 도출된 직후 북한 수뇌부의 자금줄을 죄는 BDA구좌 동결조치를 통하여 미국은 지루한 시간끌기 전술을 지속하였고, 미국 내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논쟁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악의적 방치’에 대하여 북한은 2006년 2월 10일의 핵보유선언, 2006년 7월 5일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과 10월 9일의 핵실험이라는 일련의 고조되는 조치들을 통하여 국제사회, 특히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 ‘핵을 지닌 북한과의 공포적 공존’과 ‘국제적으로 승인된 핵 없는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던지게 된다.

“레드라인”(red line)으로 예상되던 핵실험을 북한이 감행하자 관련

---

15) 이 공동성명의 의의는 현존하는 모든 북핵 프로그램의 폐기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및 북미관계 정상화와 같은 중요한 6자회담의 원칙들에 북한과 참가국들이 합의 하였다는데 있다. 만약, 6자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일치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봉쇄 및 압박전선을 형성하는데 동의하여 대북 제재 분위기가 형성되고 유엔 안보리의 결의까지 획득할 수 있었다면 미국은 경제적 제재의 단계를 거처서 북한을 압박한 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군사적 제재의 단계로 나아가는 이라크식 해법을 모색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이 경우에 한국은 물론 러시아가 추구하는 기회적 중재자 입지는 크게 약화될 것이 분명하고, 중국 또한 북한을 일방적으로 편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6자회담의 결렬을 선언하지 않고 그 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핵개발에 대한 체제안보의 논리 및 한반도 전쟁의 위협을 내세워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으로 자신의 입장에 대한 동조 내지 이해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국들은 모두 당황하였지만, 이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은 비교적 차분하였다.<sup>16)</sup> 이 기회를 틈타 미국과 일본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동참을 호소하고 유엔 대북 제재안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러시아는 알렉세예프 외무차관을 신속히 평양에 급파하여 핵실험이 가진 북한의 협상을 통한 평화적 문제해결 의지를 재확인하고 정치적 타결의 가능성이 남아있음을 국제사회에 확인시켜 주었다. 러시아는 북한에 엄격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이 북핵프로그램과 북한 정권교체 문제를 연계해서 풀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를 전략적으로 연계시키는데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핵실험 후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안보리 결의안 1718호 채택 과정에서 군사조치 배제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중, 러 양국의 입장은 유사해 보이지만, 중국은 북한과 밀착된 위치에서 점차 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비해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함으로써 북중, 북러관계의 상대적 대북거리감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러시아는 예방 차원에서의 제재에는 찬성하지만 징벌 차원의 군사적 제재에

16)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 텔레비전 프로에서(10.25) 북한이 러시아 국경 바로 옆에서 핵실험을 실시한데 대해 미국과 북한에 대한 양비론적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이는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우리 관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실험이 우리 국경에 바로 인접한, 불과 177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의 하나로 협상 과정에서 참가자 중 어느 쪽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데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절대로 사태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협상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을 사태를 악화시키는 외에는 사실상 다른 출구가 없는 곳으로 몰아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크레믈린 공식사이트(<http://president.kremlin.ru/>) 참조.

대해서는 중국보다 더욱 강경히 반대함으로써 북핵실험으로 형성된 미일 주도의 대북 강경대응 기조를 중화시키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특히, 러시아는 북핵문제가 정치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현실적인 평화적 문제해결에의 접근법을 강조하였다. 아르바토프는 “북한의 핵보유를 먼저 인정하고, 핵탄두 6개를 보유하고 있던 남아공이 평화적으로 폐기했던 것처럼 전세계가 북한을 남아공 사례로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러시아로선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핵능력을 입증한 상황에서 대북 압박 가중시키기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탄두를 만드는 등 추가적인 도발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보다 유연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만, 러시아의 경우에도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면서 이와 관련된 핵물질 및 기술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한 새로운 비확산의 레짐으로서 ‘세계 핵 테러리즘과의 전쟁 구상’(GICNT: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을 강화하는데 있어서는 적극적이다.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은 미국의 온건파들의 입장과 외견상으로는 유사한 새로운 레드라인의 설정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북핵실험 직후 평양에 파견되었던 러시아 특사 알렉세예프가 예견하였듯이, 북한은 2006년 10월 31일에 6자회담으로의 복귀를 선언함으로써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12월 중간선거 이후 라이스와 힐 등으로 연결되는 국무부 협상파가 북한문제를 관장하게 되면서 북한에 대한 입장의 변화가 감지되었고, 2007년 1월 17-19일 미-북 베를린 고위급 접촉을 통하여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가닥이 잡게 되었다. 이에 재개된 5차 6자회담을 통하여 2.13합의가 도출되

었다. 2.13 합의에 따른 문제해결의 개략적인 일정이 나오면서 각 참가국들이 저야할 부담이 생겨나게 되었고, 러시아는 한 때 북한지원과 관련된 부담나누기에 대해 대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sup>17)</sup>

전반적으로 보아 핵실험 이후 위기관리는 성공적이었지만, 북·중관계는 상대적으로 냉각되었고,<sup>18)</sup> 북·미관계의 진전에 따라 미국은 지금까지의 중국 의존적인 대북정책을 벗어나 독자적, 직접적 관계를 향상시키게 되었으며, 북리관계의 우호적 발전과 러시아의 아·태지역 영향력 확대노력이 가시화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 3. BDA 송금문제와 러시아의 적극적 대응

최근 북핵문제와 관련한 러시아의 대응에서 주목을 끄는 두 가지 적극적인 행보는 핵실험 후 대북제재를 위한 UN결의 1718호에 대한 실행령에 푸틴 대통령이 서명·공포한 것과 BDA자금 대북송금 과정에서 러시아가 자금중계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UN 결의 1718호에 따라 대북 제재 조치를 시행령을 마련하고 민관을 막론하고 러시아의 어떤 주체도 핵을 포함한 북한의

17) Alexander V. Vorontsov, "North Korea Nuclear Problem Resolution Prospects after the Joint Statement on February 13, 2007: Russia's view," International Conference hosted by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on 「North Korea's Strategic Choice after Nuclear Test and February 13 Agreement,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r」 (Seoul: Korea Press Center, April 16, 2007).

18) 한 북한 전문가는 중국의 대북 지원은 자국의 전략적, 기술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중단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창주, "주목받는 러시아의 '東進'," 『경향신문』 (2007년 6월 25일).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공포했다. 또한 UN에서 핵무기 프로그램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자로 지목한 주체와의 금전 거래도 금지시켰으며, 사치품에 대한 거래도 금지시켰다.<sup>19)</sup> 이러한 조치는 반북 정서가 심한 일본을 비롯한 서방의 환영을 받았다.<sup>20)</sup> 그 의도가 무엇이든 이러한 러시아의 조치는 북한의 핵실험 후 2006년 10월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을 때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러시아는 당초 미일 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군사적 제재를 포함하는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할 때 중국과 연대하여 이에 제동을 걸면서 일관되게 외교적 해결을 촉구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상당히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슬루츠키 러시아 국가두마 국제문제위원회 부위원장도 북한의 비협조적인 노선을 비판하면서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의하는 것은 논리적 귀결”이라고 강조했다.<sup>21)</sup>

이 조치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냉각기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었고, 또한 이번 결의안 참여가 향후 러시아의 대북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sup>22)</sup> 하

19) “Russia makes U-turn, joins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RIA Novosti* (Moscow, May 30, 2007).

20) “World must work together to sanction North Korea, Shiozki says,” *Bloomberg News* (May 31, 2007)

21) “러, 유엔 對北제재결의 6개월 만에 합류 급선회,” 연합뉴스 (2007년 5월 31일).

22) 한 러시아 전문가는 “김일성대학 연수 등을 통해 북한 간부들과 관계를 맺어 왔고 일부는 북한과 외교 활동을 하면서 친분이 두터운 외교관들이 많았다. 이번과 같이 유엔 대북제재에 동참한다는 것은 외무성과 국방성의 간부들이 물갈이가 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 러시아의 대북정책은 근본적인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다. “러, 대북제재 공식화는 친북인사 물갈이 때문,” 데일리링크 (<http://www.dailynk.com/>) (2007년 5월 31일) 참조.

지만,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7월 1-2일 미국을 방문하여 조지 부시 대통령과 WMD 확산 방지와 테러와의 투쟁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대북제재 문제 등 양국 간 이견을 미리 정리하려는 포석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러한 러시아의 처신은 러북관계의 부정적인 변화로부터 도출된 조치라기보다는 당시 지지부진한 북핵 위기해결 과정가운데 국제사회를 자극하는 미사일 발사를 시도하는 북한에 대해 적당히 경고하면서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짐이 되고 있는 UN 대북결의안 문제를 상대적으로 적은 반발의 값을 치르면서 털고 가려는 러시아의 의도가 깔려있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은 곧이어 보여준 BDA 송금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정에서 드러난다.

BDA 문제 처리가 지연되고 있을 때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과 알렉산더 로슈코프 외교차관은 미국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였다. 상업은행 경로를 통한 송금을 주장하던 북한이 미·러 간 정치적 해결을 수용한 것은 러시아를 신뢰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한 소식통은 러시아가 북한과 사전협의를 하였고 미국으로부터는 정상적 금융중개 보장을 받아냈다고 전한다.<sup>23)</sup> 분명한 목소리와 역할로 BAD 해결의 주연이 된 것이다. 미국은 꼬인 실타래를 풀게 해 준 러시아의 결단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하였다. 러시아는 마카오로부터 미국과 러시아를 거쳐 북한으로 중계되는 자금흐름을 위해 러시아 중앙은행과 ‘극동상업은행’(Dal' kombank)을 앞세웠다.

23) 이창주, 앞의 글.

이로써 러시아는 6자회담 무임승차에 대한 비판을 벗어나게 되었다. 그간 러시아는 냉전 종식 후 극동아시아에서 잃어버린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6자회담에 참가해 왔으나 별다른 역할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하지만, 러시아는 대국외교의 경험을 바탕으로 6자회담에서 ‘정직한 중개자’ 역할을 적절히 구사해 왔으며, 그간 소극적이었던 인상을 털고 BDA 자금문제로 걸들던 북핵상황의 타개를 위한 핵심적 조치에 협조하였다. 중국이 BAD문제 해결과정에서 주변구들을 실망시켰던 점과 대조되면서 일부에서는 북한이 2006년 핵실험 직전에 중국보다 러시아에 더 상세한 사전설명을 했던 점을 내세워 ‘러시아의 대(對)북한 영향력 증대론’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러시아의 이런 행동은 러시아의 ‘전략적 입장’에서 해석하는<sup>24)</sup> 것이 타당해 보인다. 2007년 5월30일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분명한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2007년 3월6일 송민순 장관의 방러 시에 라브로프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그 계획의 면모를 보였다. 먼저 북러관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북한의 대러채무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협력 및 에너지 추가지원 문제’를 효과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2007년 3월 22~23일 모스크바에서 ‘북-러 경제통상 및 과학기술 협력위원회’가 열렸다. 7년 만에 북러 간에 경제협력을 위한 본격적 협의가 시작되어, 러시아의 대북 송전, 김책제철소의 생산정상화, 북한노동력 활용, 에너지, 수송, 임업, 철강, 시멘트, 기계제작 등이 논의되었다. 북한이 경제 회생용 지원과

24)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강태호, “왜 러시아인가?” 『한겨레 일보』 (2007년 6월 21일).



협력을 구했다면, 러시아는 나진항 거점화를 겨냥한 극동개발 전략을 내세워 나진을 극동지역의 물류기지로 활용하면서 장기적으론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계 사업 및 동시베리아 석유·천연가스의 수출 중개기지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러시아 석유회사가 나진-선봉 원유 공급 및 정유시설 재가동을 제안하고, 러시아철도공사(RZD)가 나진~하산 철도 개보수 및 나진항 개발을 본격화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sup>25)</sup>

러시아의 나진항 거점화는 중국 견제 의도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진은 중국 동북삼성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교두보이다. 중국의 동진과 러시아의 남진이 충돌할 수 있는 교차점이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5월19일 북한은 외무상에 8년여 러시아 대사를 지낸 박의춘을 임명했다. 나아가 이런 흐름이 남-북-러 삼각협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예컨대 북한은 4월19일 제13차 '남북 경추위'에서 나진-선봉지구 석유화학공업기지 공동건설 및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 3월의 북-러 경제협력위가 4월의 남북 경추위로 연계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4월말 평양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철도대표들은 나진~하산 철도 개보수 사업을 추진할 합작기업을 만드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북한은 러시아에 투자자 선정 권한을 넘겼다. 이에 한국철도공사와 물류회사들이 참여한 한-러 합작 물류회사 설립이 결정되었다. 러시아가 한반도에 대한 선언적이 아닌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대내적 정치·경제 안정과 대외적 위치 회복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균형자 역할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한반도 외교가 있다. 러시아가 당장 중심세력으로 부상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6자회담 운영, 한반도 평화

25) 이창주, 앞의 글.

체제 구축과정, 동북아 다자안보구상에서 러시아의 참여와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 III. 북핵위기 해결 시나리오에 따른 러시아의 대응 전망

2차 북핵위기의 해결책으로 작동해 온 6자회담이라는 다자적 틀은 우여곡절을 겪어 오면서 그 참가국 모두가 공히 인정하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 창구로서의 공신력을 점차 높여오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6자회담이 동북아 평화 및 안보체제의 원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가고 있다는 전망을 제기하기도 한다.<sup>26)</sup> 6자회담이 당면한 북핵위기의 해결과정에서 북한은 물론 참가국들이 공유하게 된 입장은 대화를 통한 외교적 타결의 원칙, 한반도 비핵화 목표 공유, 9.19합의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것인가, 미국은 대북 강경노선을 포기하고 대화를 통한 북한정권의 변화를 지속할 것인가, 6자회담 참가자들이 장기적 동북아 안보체제에 대한 구상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가 등과 같은 논쟁적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2.13 합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전개될 북핵위기 해결의 시나리오로는

26) 통일연구원이 2007년 6월 7일 주최한 '6.15 정상회담 7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한 각 국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방안에 관해 다양한 시각을 보였으나, 러시아의 미헤예프는 2.13합의에 따라 설치된 5개 실무그룹 중 러시아가 의장국을 맡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의 활동을 통해 6자회담이 동북아 안보회담을 위한 상임기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2007년 6월 8일).

크게 부분적 성공 완전한 성공, 실패 등의 세 가지가 가능해 보인다. 물론 각각의 시나리오는 다양한 변수에 의한 변형이 가능하겠지만, 이제 북한핵 해결 시나리오에 따라 성공과 실패의 조건 및 그에 따른 러시아의 대응은 어떠할지 전망해 보도록 할 것이다.

〈표-1〉 북한의 핵 폐기 단계에 따른 조치와 예상되는 요구사항<sup>27)</sup>

구분	북한의 조치	북한의 요구	기타
1단계 현재의 핵 동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변 5MW 원자로 봉인 및 동결</li> <li>• IAEA 사찰단 입국 및 사찰 허용</li> <li>•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li> <li>• 기존 핵무기에 대한 신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 중유 5만톤 연료지원 시작</li> <li>• <u>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시작</u></li> </ul>	<u>초기 조치</u>
2단계 현재의 핵 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변 핵시설의 블능화: 원자로 등 핵심부품 제거 또는 파괴</li> <li>• NPT와 IAEA에의 복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 경수로공급 논의시작</li> <li>• 테러지원국 해제</li> <li>•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li> <li>• 해외동결 부동산 해제</li> <li>• <u>한국전쟁종전 선언</u></li> </ul>	<u>블능화 조치</u> * 6개국 외무장관 회담
3단계 현재의 핵 폐기 + 미래의 핵 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루토늄 등 핵물질 3국 이전</li> <li>• HEU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핵 관련 모든 프로그램의 중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평화협정 체결</u></li> <li>• 한반도 비핵화</li> <li>•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li> <li>• 북미 무역거래 자유화</li> <li>• 북미 간 영사급 외교관계 수립</li> </ul>	<u>핵프로그램 포기 조치</u>
4단계 과거의 핵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무기 폐기완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북미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u></li> <li>• 국제사회대북 경제지원</li> <li>• 북일 대사급외교관계 수립</li> <li>• 남북 군축 등 신뢰구축조치 실행</li> </ul>	<u>핵무기 폐기</u> *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 본격화

27) 남성욱, “2.13 합의의 이행 실태와 향후 전망,” 한국원자력통제기술연구원 및 남북경제연구소 주최 『주변국 핵활동 정보수집 분석 세미나』(라마다르네상스호텔, 2007년 5월 23일) 발표문 내용을 참조하여 재구성.

## 1. 부분 성공의 조건과 이후의 대응방안

키슬라크 러 외무차관은 2007년 6월 25일 BDA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북핵문제를 풀기 위한 2월 합의가 이행돼야 한다는데 당사국들이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해 원자로 폐쇄 등 합의내용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러시아에 의한 북한으로 자금이체가 완료되었음을 밝히면서 이로써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간에 협력을 통한 2.13합의 이행이 시작되길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했다.<sup>28)</sup> 이에 IAEA의 사찰단이 북한사찰 준비를 시작하였으며, 한국도 대북 중유지원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북핵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은 길고 험한 시간을 요구하겠지만,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실행되면서 초기조치 이행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노력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최소한 <표-1>에서 제시된 1단계 초기조치와 2단계 불능화조치까지 달성할 수 있다면 이는 최소한의 성공의 요건을 구비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단계 및 2단계의 조치는 주로 북한이 현재 영변원자로를 통하여 얻고 있는 플루토늄의 동결 및 제거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의 핵'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북한의 과거의 핵(이미 제조한 조악한 수준의 무기급 핵탄두 등)이나, 미래의 핵(그 존재 증거가 포착되지 않은 HEU 프로그램에 따른 핵) 등에 대한 논의까지 끌어들이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워 보이지 않는다.<sup>29)</sup>

28) 『연합뉴스』 (2007년 6월 27일).

29) 과거의 핵, 현재의 핵, 미래의 핵에 대한 개념은 남성욱(2007)의 글에서 사용된 내용을 활용하였다.

또한, 2단계 불능화조치까지의 최소 성공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허락될 수 있는 시간은 미국 대통령선거가 있는 2008년의 중순 정도까지라는 부담이 있다. 클린턴 행정부의 북한문제 해결이 시간에 쫓겨 완전한 결실을 거두지 못했던 점을 상기해 볼 때 이는 북한이나 미국 양측에게 공히 작용하는 부담일 것이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표-1>에서 나타난 1단계 초기조치의 실행단계까지 도달하는 데만도 장애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봉인하고 동결하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IAEA사찰단의 사찰범위를 영변 핵시설에 국한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의 범위에서도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등은 포함시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더구나 무기급으로 분류되는 플루토늄 내지 북한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핵탄두까지 신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최근 분위기로 보아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가장 중요한 협상 카드로 남겨두려고 할 것이다. 최근 북한은 인도나 파키스탄과 비슷한 대외관계 형성을 요구하고 나섰고, 6자 회담의 기조는 북한의 핵 역량 박탈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라는 점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남한도 비핵화를 선언하고 과거의 우라늄 및 플루토늄 실험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AEA 사찰도 남북한이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6자 회담에 새로운 아젠다를 설정하겠다는 북한의도에 따른 것인데, 지금까지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시도에 대응하지 않고 무시해왔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주장까지 하면서 북한의 핵능력을 애써 평가절하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대응은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주장을 막기 위한 '준비사격'의 성격을 띤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북한에게 제2차 핵실험의 성공을 시도하여야겠다는 동기를 부여해줄 수도 있다.

최근 HEU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비교적 유연해 진 듯하다. 미국의 태도변화는 전술적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유연성조차 발휘하기 쉽지 않은 미국으로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는 비교적 확고해 보인다.<sup>30)</sup> 대북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급 관료들이 최근 고농축 우라늄과 관련하여 북을 비난한 공화당의 주장을 일축한 것도 미국의 태도 변화를 엿볼 수 있는 현상이다.<sup>31)</sup>

하지만, 기존 핵무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단기간에 완벽히 폐기하는데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면서 단기적으로 북한의 핵이전 행위를 통제하면서 외교적 방법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핵 폐기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참가국들이 어떻게 의견조정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인가가 주요한 고비가 될 것이다.

여기서 러시아의 입장은 주목할 만하다. 러시아는 북핵문제 해결의 본질은 “문제 국가”를 변화시키는데 있기 보다는 “문제 지역”의 군사적 갈등의 가능성의 제거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북한이 지구적, 지역적 안보체제에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선택의 진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건전한 접근법

30) 최근 미국의 대북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남성욱(2007), 8-15쪽.

31) “U.S. to offer North Korea face-saving nuclear plan,” *New York Times* (March 5, 2007); “U.S. acknowledges gaps on North Korea nuclear program,” *Reuters* (February 22, 2007); “U.S. less confident of North Korea covert program,” *Reuters* (February 27, 2007).

임을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는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해 북한을 포함하는 어떤 “문제국가”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 국가들에 대한 압박보다 그 지역의 군사적 갈등의 가능성을 줄이고 안보적 위협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sup>32)</sup> 따라서 2.13 합의에 따른 초기 이행조치가 실행되어 <표-1>의 1단계 조치가 취해지고 부분적 성과가 나타나는 상황이 가시화되면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전력하게 될 것이다. 특히 러시아가 의장을 맡고 있는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러시아는 이러한 지역적 문제를 제거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 시기에 즈음하여 이 실무그룹의 사무국을 설립하려는 노력이 집중 논의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무국의 설치야말로 실질적 성과의 교두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sup>33)</sup>

우려되는 또 하나는 베이징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와는 거리가 먼 각국 나름대로의 유·무형의 이득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점이다. 게다가 일단 북한이 ‘조기 수확’을 얻고 일부 당사국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북핵 문제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또 원점으로 돌아가 교착 상태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겹치고 있다.

이러한 부분적 성공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의 균형적 중재자의

32) 백준기,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평가,” 제4차 한러포럼 「북한 핵실험과 러시아」(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6년 11월 9일) 발표문.

33) 백승주, “6자회담 실무그룹 지원방향 및 전망,” 한국원자력통계기술연구원 및 남북경제연구소 주최 『주변국 핵활동 정보수집 분석 세미나』(라마다르네상스호텔, 2007년 5월 23일) 발표.

역할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금까지 6자회담 진행과정 중에서 러시아가 균형적인 입장과 제안들은 잘 표명하여 왔지만, 실제로 그 입장을 실현시킬 구체적인 실행력이나 기여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도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BDA자금 중계 역할의 수행 및 일련의 대북 경제협력 사업들을 강화시키고 있는 태도는 러시아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해 준다. 러시아는 여러 프로젝트들을 통하여 대북 영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구체적으로 동북아 평화 및 안보체제 형성을 위한 자신의 이해(利害)를 가시화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함은 물론 한반도의 균형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2. 완전성공의 조건과 이후의 대응방안

〈표-1〉에서 나타나는 1단계 초기조치 후 부분적 성공을 거둔 뒤 향후 6자회담의 진전과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결정짓게 될 가장 중요한 2단계 불능화조치 문제는 한반도 종전선언(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한 미국의 양보가 있을 경우 평화협정의 체결)이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단계까지 갔을 때에 이미 평가하고 있듯이 부분적인 성공이 가능할 것이다. 이로써 북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보적 우려를 일부 덜고 경제적인 보상과 국제교류의 환경을 개선하는 이득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지적한 대로 북한이 ‘조기 수확’을 얻고 일부 당사국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북핵 문제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또 원점으로 돌아가 교착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특히, 이 불능화조치를 부시 행정부가 이루게 나면 거의 시간



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차후 일정이 차기 정부에게 이양될 공산도 크다. 따라서 이 부분적 성공을 불가역적 동북아 지역의 평화프로세스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구축을 가속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중요한 것은 3단계조치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현재의 핵을 폐기하는 일로부터 미래의 핵을 포기하는 단계까지 나가게 만드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게 체제에 대한 장기적 안보의 확신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성공하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이때 6개국 외무장관 회담과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급 회담을 통하여 기본적 방향과 행동의 원칙을 결정하는 기재가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여부와 북한이 장기적인 안보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는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축 여부가 북한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무기급 탄두를 포함한 완전한 핵폐기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도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의 달성을 곧 북한의 체제안보를 확보함으로써만 얻게 될 상징적인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구축과 관련된 주변국들의 입장은 매우 복잡하다.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누누이 밝혔듯이, “북핵 협상은 6자회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북아 평화 안정까지 가는 것”이다. 나이(J. Nye) 하버드대 교수도 “6자회담이 결국 느슨한 형태의 안보 협력 체제로 자리 잡는다면, 유럽에 이어 동북아 지역에도 완전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6자회담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로 가기까지는 북핵의 완전한 제거까지 소요되는 긴 시간과, 동북아 3개국 간의 역사적·지정학적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문

제가 있을 것이다. 중국도 이 6자회담 과정에서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하는 등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적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며, 미국 주도형 다자체제의 출현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중국의 입장은 러시아에게서도 발견된다. 북핵 6자회담 러시아 수석대표 로슈코프 외무차관은 2·13 합의 직후 “한·미 양국은 북핵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합동군사훈련 실시 계획을 바꾸기를 기대한다”고 밝힌바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가령 군사훈련 중지와 테러방지협력 등 긴장완화와 상호협력 조치들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겠다는 계산이다.<sup>34)</sup>

이같은 각국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북핵문제의 완전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아마 3단계 조치부터 6자회담 내지 6개국 외무장관 회담의 진전은 어찌면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의 활동성과에 따라 그 진행 속도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입장은 확고하다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전보장을 위해 러시아는 이미 냉전 시기부터 동북아에도 유럽안보협력회의와 비슷한 형태의 안보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포괄적 국제안보체제,’ ‘아시아판 헬싱키회의,’ ‘전아시아포럼’ 등과 같은 집단안보체제 구상을 제기하였다. 소련 붕괴 이후에도 러시아는 동북아의 안보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자간 대화체제 설립을 꾸준히 주장하였고, 1차 북핵위기 시에 8자회담 제안이나 1997년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를 다루기 위한 10자회담 제안 그리고 다자회담의 하위구조로

34) “‘동북아 평화체제’ 4강 계산은?” 『조선일보』(2007년 3월 11일).

서 운영되는 실무그룹에 대한 구체적 제안을 하였다.<sup>35)</sup> 그리고 가장 최근에 2차 북핵위기와 관련해 2002년 10월에 외무차관 로슈코프가 6자 회담을 제안하면서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조성을 주장하여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sup>36)</sup> 따라서 러시아는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에 대한 아이디어의 주창자로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6자회담 실무그룹 활동을 통해서도 그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또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러시아의 입장도 비교적 선명하다. “러시아의 기본적 입장은 다음 세 가지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첫째는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성하는 기본과 원칙에 대한 솔직한 입장을 교환하자는 것이다. 둘째, 지역적 안보상황 및 불안과 우려에 대한 각국의 솔직한 시각을 교환하자는 것이다. 셋째는 상호불신을 종식하고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서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월 16일 처음으로 열린 6자회담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회의에서는 한국만이 지역안보에 대한 자국의 솔직한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의견개진이 모든 참가국들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짐으로써 참가국들의 전략적 입지가 이해되어져야 한다. 이 실무그룹을 비롯하여 6자회담 내에 구성된 여러 실무그룹들의 기본적인 과제는 6자회담이 잘 진행될 수 있는 유리한 여

35) 이러한 제안은 사실 지난 2차 6자회담 이후 열린 실무자회의(working group)와 관련된 제안이 러시아에 의해 제기되었음을 말해준다. 러시아가 제안한 한반도 다자안보체제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 Valentin Moiseev, “On the Korean Settlement,” *International Affairs*, Vol. 43, No. 3 (Moscow, 1997).

36) Vladimir Kutakov, “Russia offers Six-Party Discussion Format in Northeast Asia,” *ITAR-TASS* (October 1, 2002).

건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여건조성을 위해서 다른 실무그룹 활동은 주로 막혀있는 양자 간의 대화를 소통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집중될 것이다. 즉 다자적인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양자 간 구체적 이슈와 관련된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실무그룹이 진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다자틀 속에서 진행되는 양자화 프로세스를 다시 재그룹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실무그룹이 바로 동북아 평화체제 실무그룹이 될 것이다.”<sup>37)</sup>

평화체제 실무그룹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공동체의식(sense of community)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6개국에 가지고 있는 공통성과 협력에 기여하는 긍정적 요소들을 찾아내어 그것들을 강화하는 전략을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하여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건설적 공통기초”(constructive common ground)를 다지는 것이 이 실무그룹을 이끄는 러시아의 사명이라는 것이다. 이에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는 우선적으로 고위급회담(Senior Officer Meeting) 형식을 가진 NEACD와 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러시아는 선호하며, 유럽에서 시도되었던 신뢰구축조치(CBMs) 같은 문제로부터 시작해 조금씩 커다란 틀로 논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파악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구축을 통해서만 북한뿐만 아니라 동북아 국가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음은 명확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동북아 안보체제를 위한 구상은 긴 시간을

37) 필자의 러시아 외무성 본부대사, 6자회담 리츨 수석 부대표, 6자회담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위원장 라흐마닌(Vladimir Rakhmanin) 대사와의 인터뷰(2007년 5월 22일, 롯데호텔) 내용.

요하며, 다시 이를 제도화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구상과 논의가 진행된다는 사실은 북한과 미국의 수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북한은 미국과의 수교를 통해 확신을 가지고 한반도 비핵화조치에 나아올 수 있을 것이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핵까지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다.

### 3. 실패의 조건과 이후의 대응방안

실패의 조건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표-1>에서 밝힌 1단계 초기조치를 이행하는 가운데 미국이 과거의 핵과 현재의 핵 그리고 미래의 핵을 모두 일거에 해결하겠다는 의욕(?)을 보일 경우에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1단계 초기조치를 우여곡절 끝에 달성하고도 2단계 불능화조치라는 결정적인 단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사일기술통제문제나 인권문제 내지 북한사찰문제와 같이 좁은 의미의 핵문제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북한문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게 될 경우 문제는 한층 복잡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지루한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시간선(필자는 1차 초기조치를 위한 시한이 2007년 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을 넘어서게 될 경우, 미국 내의 라이스 장관과 힐 차관보로 연결되는 협상파에 대한 강경파의 공세가 강화되고 미국 내 선거 일정에서 일정한 협상의 성과를 과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부시 대통령이 하게 될 경우, 결국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의 계기를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은 이에 핵무기 2차 핵실험을 감행할 공산이 크고, 이는 다시 한미 및 미일 동맹을 강화시킴으로써 동북아에서의 대결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군비경쟁이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실패의 조건들 속에서 그동안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을 강조해 온 러시아의 중재자적 입장은 크게 위축될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북핵위기를 해결하고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결성을 구축하는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역적 대화의 불씨로서 6자회담 내지 6개국 장관회담의 모티브를 살리려는 노력을 계속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이런 실패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때 기대이익의 가장 큰 손실을 볼 나라가 러시아이기 때문이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러시아는 동북아에서의 핵확산을 포함한 군비경쟁으로 새로운 경쟁의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치 않고 있으며, 나아가 자국의 아태지역 경제로의 편입 일정이 차질을 빚는데 따른 엄청난 손해를 결코 수용하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러시아는 지역적 평화안보체제의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북한-러시아-중국 사이의 삼각경제협력을 통하여 대안적 이익실현의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여하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데 대해서는 분명히 자국 영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군사충돌로 인식하여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동시에 북한에 의한 어떤 돌발행동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과 북한의 사이에서 정직한 중개자 역할을 해 왔지만, 동시에 이 둘에 대한 견제자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러시아는 6자회담 기간 동안에 북한에 대하여 어느 정도 넘지 말아야 할 선(線)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일도 하였다.<sup>38)</sup> 특히, 1차 6자회담 직전 러시아의 한 일간지

38) "Deputy Foreign Minister Says Russia May Reconsider Sanctions If North Korea Produces Nukes," *Interfax* (April 11, 2003).

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기사를 보도하였다.<sup>39)</sup> 북한의 남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은 러시아 극동의 오염과 심각한 피해를 필연적으로 동반하기에 이런 북한의 도발 징후가 포착될 경우 내지 북한과 미국/남한과의 핵전쟁이 발발하게 될 경우 러시아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러 태평양함대의 북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이라는 입장을 지지하는 전략가들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는 2003년 8월 18~27일에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중국과 함께 2005년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평화의 사명-2005’이라는 합동군사 훈련을 블라디보스토크와 황해 및 산동성 일대에서 수행하였다. 이러한 러시아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의 기사와 러시아의 군사적 능력 시위는 결국 북한과 미국에 대해 러시아가 동북아의 중요한 군사대국으로서 가지는 능력을 과시하고 북한의 과도한 도발이나 미국의 무력사용에 대한 일정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sup>40)</sup> 이는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지니는 당사자 의식의 강력한 표현이며, 북한과 미국 양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하여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국가로서 자국의 위상을 표현한 중요한 신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핵을 보유한 정권과의 공존 및 관리라는 과제보다 러시아를 더 괴롭게 할 수 있는 사태는 도리어 더 이상 체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북한 정권이 급속하게 붕괴되는 등과 같은 북한 급변사태이다. 이에 대량의 탈북자 사태가 발생하거나 북한을 탈출한 반군들이 중국 동북3성

39) Oleg Zhunusov, Elena Shesternina, "If Tomorrow There Is a War That in Two to Three Hours' Time Involves Vladivostok," *Izvestiya* (August 1, 2003).

40) 주승호, "러시아의 북핵문제 6자회담 전략," 『국방연구』 47권 1호 (2004), 95-96쪽.

이나 연해주를 거점으로 활동을 벌이게 될 경우에 러시아가 적지 않은 악영향 하에 노출될 것이고, 이는 이 지역 질서의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에 러시아는 이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41)</sup>

따라서 러시아는 북핵위기 해결이 실패의 조건 속에서 표류하게 되더라도 이 문제를 다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단계적인 변화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와 이해가 일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 IV. 러시아 북핵 정책과 한국의 대응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상실한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회복과 극동 및 시베리아의 아태지역 경제로의 편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북핵 및 한반도 문제에서 당사국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정직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러시아가 발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적극적 활동을 펴왔다. 그 결과 최근 BDA 자금중계와 대북 경협을 활성화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평판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고양해 나가고 있다.

2.13 합의 이후 논의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시나리오는 크게 부분적 성공, 완전한 성공 그리고 실패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

41) 백준기, 앞의 글, p. 11.



부분적 성공의 시나리오와 관련해서 러시아는 BDA문제해결과 같은 역할을 바탕으로 초기 이행조치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이견들을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이러한 초기 이행 조치를 불가역적인 프로세스로 정착시키기 위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진척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러시아의 노력은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북아 안보체제의 구축을 통해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기초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초기조치 및 불능화조치가 진행되는 가운데 생겨난 이견이 6자회담을 마비시켜 2.13 합의의 실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러시아는 새로운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북한문제로서가 아니라 지역적 안보문제로서 북핵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핵위기로 지연되고 있는 러시아의 프로젝트들이 좌초되는 것을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동북아 및 한반도의 안보협력에 있어서 러시아가 수행할 수 있는 중재자, 균형자, 전략적 협력자로서의 가능성을 재발견하고 현실화하기 위한 러시아외교의 재정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동북아 경쟁구도와 관련하여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이다. 이 때 동북아 질서에 대해 한국과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북핵위기 해결과정에서의 협력을 넘어 중·장기적으로는 러시아를 어떻게 동북아의 세력균형화와 다자안보 질서의 수립이라는 관점에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 전략의 수립이 대러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러시아의 극

동·바이칼 지역개발전략 및 아태지역 경제협력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남·북·러 삼각협력을 통한 양국, 삼국 및 지역 협력을 가속화하는 가능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남·북·러 3국간 경제협력은 정체된 북·미 및 남북 관계를 돌파하는 합리적인 방안의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러 외교의 발전을 위한 한국정부의 복합적 구상이 요청된다.\*

## 〈참고문헌〉

- 강태호, “왜 러시아인가?” 『한겨레』 (2007년 6월 21일).
- 남성욱, “2.13 합의 이행 실패와 향후 전망,” 한국원자력통계기술연구원 및 남북경제연구소 주최 【주변국 핵활동 정보수집 분석 세미나】(라마다르네 샹스호텔, 2007년 5월 23일) 발표문.
- 박건영, “부시 행정부의 동아시아정책,” 『국가전략』 7권 4호 (2001).
- 백승주, “6자회담 실무그룹 지원방향 및 전망,” 한국원자력통계기술연구원 및 남북경제연구소 주최 【주변국 핵활동 정보수집 분석 세미나】(라마다르네 샹스호텔, 2007년 5월 23일) 발표문.
- 백준기,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평가,” 제4차 한러포럼 【북한 핵실험과 러시아】(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6년 11월 9일) 발표문.
- 신범식, “6자회담과 러시아의 역할,” 한국북방학회, 서울평화통일포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개국의 입장과 전망】(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05년 4월 13일) 발표문.
- 이창주, “ 주목받는 러시아의 ‘東進’, ” 『경향신문』 (2007년 6월 25일).
- 주승호, “러시아의 북핵문제 6자회담 전략,” 『국방연구』 47권 1호 (2004).
- 홍완석, “북핵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역할,” 『한국과 국제정치』 19권 2호 (2003).
- Alexander V. Vorontsov, “North Korea Nuclear Problem Resolution Prospects after the Joint Statement on February 13, 2007: Russia’s view,” KAI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orth Korea’s Strategic Choice after Nuclear Test and February 13 Agreement,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r,’ (Seoul: Korea Press Center, April 16, 2007).
- Alexandre Y. Mansourov, “Russian President Putin’s Policy Towards East Asia,”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XV, No. 1 (Spring/Summer 2001).
- Christopher D. Jones, “The Axis of Non-proliferation,” *Problems of*

- Post-Communism* Vol. 53, No. 2, (March 2006).
- George Perkovich et als., *Universal Compliance: A Strategy for Nuclear Security*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04).
- Oleg Zhunusov, Elena Shesternina, "If Tomorrow There Is a War That in Two to Three Hours' Time Involves Vladivostok," *Izvestiya* (August 1, 2003).
- Valentin Moiseev, "On the Korean Settlement," *International Affairs*, Vol. 43, No. 3 (Moscow, 1997).
- Vladimir Kutakov, "Russia offers Six-Party Discussion Format in Northeast Asia," *ITAR-TASS* (October 1, 2002).
- Vladimir Tkachenko, "North-South Summit and Russia-North Korea Relations," *KIEP World Economy* Vol. 3, No. 7. (2000).
- Yong-Chool Ha, Beom-Shik Shin, *Russian Nonproliferation Policy and Korean Peninsular* (Strategic Studies Institute at U.S. Army War College, Monograph, January 25, 2007).
- А. Воронцов, "Война компромиссов," (2003), in <http://north-korea.narod.ru/vorontsov.htm>.
- Алексей Арбатов, Василий Михеев (Ред.) *Ядерно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Москва: Московский Центр Карнеги 2005).
- Бом-Сик Син,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в отнош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о время 2-ого президентского правления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и её значение дл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Korean Journal of Slavic Studies*, Vol. 19, No.2 (2004).
- ГД Толорая, "Россия-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осле саммита в Сеуле,"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No. 2 (2001).
-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Вестник* No.8 (август 2000).